第259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4月18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審査된案件

1. 현안보고(계속)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현안보고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시는 사항들을 진지하게 수렴해서 외교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한미 FTA 등 주요한 현안 문제들은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여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지한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독도 문제가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현안으로 한일관계 또 대통령님의 아프리카 순방 후속조치, 한미 FTA 추진, 6자회담 전망, 또 저의 구주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신임 외교통상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영우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박노벽 구주국장입니다.

마영삼 아중동국장입니다.

박석범 국제경제국장입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신임 외교정책실장은 내일 귀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후 보고를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북핵외교기획단장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면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동해상 수로측량 추진계획 관련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 EEZ 수역을 포함하는 동해상에서 수로측량을 할 예정임을 4월 13일 목요일 일본 관보에 게재하고 수로측량 계획을 IHO,

즉 국제수로기구에도 통보했습니다. 일측은 금년 4월 14일에서 6월 30일간 울릉도 동쪽 약 30~40해리 지점의 독도 인근 우리 측 EEZ 수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역에서 탐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엔 해양법협약에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246조에 있고 연안국의 허가에 따르지 않는 조사에 대해서는 제253조에 따라서 해당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서도 우리의 영해 외측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7조제1항에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선, 검색, 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는 한일 양국의 EEZ 경계가 법적으로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비록 해양 경계는 없으나 우리 또는 일본 연안에 근접한 수역에서는 상대방의 허가를 얻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독도-울릉도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이라고 강변하면서 금번 탐사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EEZ가 될 수 없는 수역이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기본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는 사태 발생 직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금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번 사태가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EEZ 경계 문제로 국한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본이 탐사를 강행할 경우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에 의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일측이 우리 EEZ 내 수로측량 계획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본 대응 방향에 따라서 사태 발생 직후인 4월 14일 금요일 외교부제1차관이 외교부장관대리 자격으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금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측이 탐사계획을 자진 철회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4월 17일에도 우리 주일대사가 야치 일본 외무차관과의 면담 시에 탐사계획의 철회를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번 사태로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이 악화되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경비 및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일측이 탐사계획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탐사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초당적, 국민적 지원을 받아가면서 일측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응 태세를 표명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번 사태로 일측이 독도에 대해서 분쟁 지역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일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후속조치에 관련해서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대외원조……

○위원장 임채정 잠깐요, 장관도 앉아서 보고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금년 3월에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빈 방문 시 발표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의 경제발전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간주하고 협력 구축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능력 배양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하고 봉사단 파견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아울러 의료보건,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 격차 해소 등을 돕고자 합니

다.

자료 2페이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뭄 피해가 극심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수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에 우리의 수자원 개발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11월 중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경제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알제리 공동위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는 각각 5월과 9월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한미 FTA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3일 협상 출범 이후의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서울에서, 그리고 4월 17일 우리 시각으로는 어젯밤 워싱턴에서 양측 수석대표 간에 두 차례의 사전준비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협상 일정, 분과 구성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정부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 외교부 내에는 한미 FTA 협상을 전담하는 한미 FTA 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24개 부처 총 130여 명이 참여하는 정부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매주마다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된 한미 FTA 주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협상 추진 체계를 통해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주요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서면과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전준비협의 시 양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협정문은 5월 초 교환하게 되며 6월 초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금년 중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상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하도록 이익의 균형적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지킬 부분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대응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의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자회담은 2005년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이후 북측이 BDA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연계함에 따라 교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정부는 6자회담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러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긴밀한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청와대 안보실장 방미,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방문 협의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18일 북경 3자 회동, 3월 7일 미측의 대북 브리핑이 개최된 데 이어 최근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동북아 협력 대화 계기에도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각적인 양자 및 다자접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각국 수석대표들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회담 재개 및 진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3회의 남북 접촉을 비롯해서 한미, 한중, 한일, 한미일 비공식 협의 등 적극적인 접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계기에 한중일 3국은 북한의 회담 복귀를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마는 북측은 BDA에 동결된 예금을 되찾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한편 미측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회담의 틀 내에서 BDA 문제 등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난번 NEACD 협의를 계기로 북측이 관련국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BDA 문제와 6자회담 복귀를 연계하는 것이 무

익하며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으리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북측이 금번 협의 결과를 기초로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차기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9월 19일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담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한일관계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는 경색되었지만 경제·문화·인적 교류는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정치적 경색 국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아울러 지난주 일본 해상보안청의 동해상 우리 EEZ 수역 내 해저 탐사 계획 고시, 최근 외부에 유출된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 내용 등 일측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교역액은 2004년 680억 불에서 2005년 724억 불로, 인적교류는 2004년 400만 명에서 2005년 417만 명으로 증가하고 일본 내 한류가 유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한일 간 상호 단기사증 항구적 면제 실시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대 조치 등이 향후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양국 관계의 근간임을 일측에 강조하면서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한 정치관계 경색이 비정치적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작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이어 시마네현은 올해에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일본 문부성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가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표기의 오류 시정, 자료조사, 국제법적 연구 심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역이용되지 않도록 감정적이 아니라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코다 메구미 남편의 신원 확인 문제 관련사항입니다.

우선 관련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코다 메구미는 77년 일본 니이가타항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었으며 북한당국에 의하면 동인은 86년 김철준과 결혼, 이듬해 딸 김혜경을 낳았고 94년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일본 정부는 김혜경과 우리 납북자 중 김영남 씨가 혈연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DNA 감식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4월 12일 일본 측으로부터 김혜경의 혈액을 제공받아 자체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영남 씨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기본 책무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서술한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는 4월 5일 외교장관 정례 기자브리핑과 외교 경로를 통해 동 보고서의 실체 확인을 요청하고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의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의 구주 방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안보리 이사국인 덴마크와 러시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그리고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 및 교황청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금번 구주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구주 국가들의 지속적 기여를 확보하는 한편 경제통상 확대, 영사 보호, 문화교류 증진 등 제반 양자 협력 이행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저의 유엔사무총장 입후보와 관련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대유럽 외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께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반기문 장관님을 비롯한 외교부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때도 주장해 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에는 국방력보다 외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렇게 보면 외교가 조금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사실 독도 문제로 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방 후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만 감정적인 대응 조금 하고 몇 마디 하다가 또 쑥 들어가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다시피 해방 후에는 이승만 독트린이라고 해서 이승만 라인으로 해 가지고 일본은 그것을 감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 중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나 1999년 1월에 발효한 어업협정 때문에 이것이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 우리는 목소리는 컸지만 지키지 못하고 저쪽은 차츰차츰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독도 문제 때문에 단지도 하고 데모도 하고 정말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때마다 뭐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한 말씀을 내가 한번 들려 주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가지고 전쟁박물관인 류슈칸에 가 보고 싶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교전 당사국 간의 외교적 언사는 대단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것은 반어법으로 비아냥거린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뭐였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한국이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해 신경질적인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그리 의미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노정권은 모든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악자를 만들고 이 악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이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치 수법을 쓰고 있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임기 중에 반일 강경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요새 소위 일본에서 문제가 된 보고서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힘을 뒷받침하지 아니하는 어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균형론이라든가 또는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든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조치는 못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장관님 보고에 보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응조치에는 무력적인, 말하자면 나포라든가 격침이라든가 이런 무력적인 대응들도 포함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구체적인 대응 수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 조치도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내법 또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점을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우리 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면 그 법대로 실행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스스로 철회하도록 외교적인 압박을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갖다 상정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내법 국제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면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우리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炳國 委員 법대로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해서 확고히 수호할 의지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정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계속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정부를 신뢰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동맹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한일 관계에서 무슨 분쟁이 생길 때는 미국이 우리를 좀 도운다 할까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도 좀 했는데 요즘은 미국이 완전히, 반미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나라와 등을 지고 이제는 도리어 일본 편에 서서 거중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중재 노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의 역사인식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회담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우리 간부들이 카운터파트를 만나는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도 아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서는 아마 한일 관계가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문제에 바탕을 두고 원만하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미일·한미 관계 또 한미일 이러한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崔炳國 委員 미국의 힘을 빌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도록, 외교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켜야 된다는 획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메구미라 하는 일본인을 납치했다 하는 사건도, 메구미가 KAL기를 납치해 가지고 폭파했던 김현희의 일어 선생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여러 가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崔炳國 委員 확인은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납치해 간 김영남의 부인으로 애까지 낳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KAL기 사건조차도 지금 일부 친북 좌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우리 정부에서 조작한 것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요.

또 지난 3월 30일 한미 양국 군의 해양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운동단체인가 하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장갑차 앞을 막은 사건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그래서 '양키 고 홈'을 주장도 했고요.

지난 4월 7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주민 600여 명들이 강력한 저항을 한 사태도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여기에서 주민들은 한 200명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 한 400여 명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불순세력 개입했다 해 가지고 전원 처벌을 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지금 이 정부는 오불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익에 대단히 손상이 되고 안 되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한 대응을 해 달라고 어떻게 의견도 제시 안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난번에 한미 RSOI 훈련했을 때에 몇 가지 훈련을 방해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러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고발한다고 해 놓고 난 후에 유

야무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강력히, 국민들이 보고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왔던 인물들은 뭐고 그 사람들은 뭔지를 색출도 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5000만 국민들의 안보가 달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몇 사람의 소수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설령 다른 부처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서는 뭔가 목소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점에 대해서는 NSC 상임위라든지 이런 기회에 저희 입장 또 외교부의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이 독도 문제도 이러한 우리 국내의 사정과 무관치는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이렇게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이 결과가 바로 오늘날 독도 문제가 이만큼까지 비화된 데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예, 김부겸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측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는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제법상 국내법상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또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처하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 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부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은 비상업용 선박이고 이 비상업용 선박은 국제법상 군함과 법적 지위가 똑같기 때문에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연안국은 그 선박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정선·검색 또는 나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처 내에 이런 원칙, 이것은 우리 국내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 제8조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법과의 충돌 관계에 대해서 또 국민감정과의 괴리에 대해서 장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내법에 여러 가지 단계, 조치 내용이 있고 또 국제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상황이 진전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문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과 국민들의 여론 혹은 감정 사이에 늘 일정 괴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도 역대 정부가 과거 이승만 대통령 정부처럼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가 늘, 항상 걸려 있고 해결되지 못한 채 넘어왔느냐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느슨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엄포를 장관으로 하실 수 있는 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께서 조용한 외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했다고 그래서 취해야 될 조치를 안 취했다든가 이런 점은 한번도 없고 독도의 영유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우리의 주권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엄정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저를 포함해서 대변인 논평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입장을 강력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위원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탐사 전에 아마도 한국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다는데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번 탐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탐사의 여러 가지 자기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부겸 위원 아까 장관께서 보고하실 때도 이 문제를 우리 정부는 EEZ 침범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하고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다시 독도의 영유권 문제 혹은 국제 문제화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늘 답답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왜 국민들한테 이 문제가 분쟁화되는, 분쟁지역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결과적으로 일본의 기도를 볼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함으로써 이 문제가 분쟁지역이다 이런 것을 기도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선 그러한 일본 측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유권 문제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EEZ에 관한 획정이 한일간에 합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선포한 EEZ 경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해양탐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김부겸 위원 최근 고이즈미내각 이후에 고이즈미 총리는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참 자신들은 검정이라고 인정 안 하지요? 그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최근 각종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어찌 보면 아주 도발적인 이런 외교적 자세 혹은 우경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장관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경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우경화 성향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롯한 역사 인식을 잘못하고 인근국과의 관계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누차 외교적으로 또 어떠한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단 한국 정부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북아의 나라들이 다 같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는 미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무역촉진권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내년 6월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자라는, 어찌 보면 앞으로 협상기간이 불과 열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 스스로가 협상기간을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여러 가지 협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TPA가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시한이라고 그럴까요, 시간적인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또 협상의 상대방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외교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상 시한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지키지 않거나 또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양국간에 서로 이익을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협상을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우려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시한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위원 국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우리가 그나마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라든가 쇠고기 수입 재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미리 빗장을 풂으로써 협상의 주요한 칩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지적을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게 한미 FTA 협상에 가면 당연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와야 될 그러한 의제가 돼 있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1998년부터, 한미투자협정 할 때부터 현안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를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오래, 7~8년간 현안이 돼 있던 스크린쿼터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협상한 것이고, 쇠고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우리 한국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하고는, 여러 나라가 다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미 FTA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우리가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부겸 위원 결국 장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미 FTA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협상에 임하겠지만 국내에서 각 부분, 한미 FTA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익집단이라든가 계급·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혹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시한에 묶여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 단언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아까 반 장관께서 독도 문제로 반일감정이 격화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국민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도는 엄연히,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이제 더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다시……

○田麗玉 委員 그러니까 아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요점만 답해 주시지요, 시간도 없는데.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우리 주권을 지키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자제해 주고 또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냉철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이러한 외교사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철한 마음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바람직스러운데 외교부가 그동안 했던 것 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을 보면 그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 장관은 지난번에 일본 외무성의 한국의 정세 보고서라는 일개 사무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가 비록 사무관에 해당하는 직원이 쓴 거라고 하지만……

○田麗玉 委員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고요,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일본 정부에 그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 요청했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인가 그저께 주한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청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田麗玉 委員 말하자면 한마디로 일본의 외무성에서는 외교부장관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비웃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공식 반응은 뭡니까? 2006년 4월 5일에 다니구치 부대변인이—그것도 부대변인입니다, 대변인도 아니고—'사안의 성격상 확인해 줄 수 없다, 우리는 부정도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이 찬물을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 2005년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각박한 외교

전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말하자면 국내 정치의 하나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화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반응도 없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국민한테 냉정하고 정부는 아주 잘하겠다고…… 그동안 보여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 문제로 해결하겠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영유권, 우리가 갖고 있는 실효 지배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EEZ 경계 문제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엔 해양법 제246조와 1996년부터 맺어진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즉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의 독도에 대한 EEZ 협정에 보면 이것은 아직도 협정 자체, EEZ 자체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무획정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와 가지고 아주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무대책 아닙니까? 획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가 아니라 EEZ 경계 이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EEZ 경계 획정에 대해서는 2000년의 네 번째 회담을 끝으로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협상은 언젠가는 재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이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로 바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외무성 내부문서 관련해서 일본 정부 측에서 문서 내용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점은 설명을 해 왔고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자세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점을 해명해 왔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것을 일본 측의 사과나 사죄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 길게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시 독도 문제로 돌아갑시다.

1997년 3월 한국은 일본 측의 주장에 굴복해서 이른바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과 어업협정을 나누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으면 독도가 한국 측 수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동해에 잠정적인 합의수역을 설정하자고 말입니다.

한국정부는 97년 10월 스스로의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일본의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중간선 주장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독도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잠정적인 합의수역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측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번에 해양 탐사선이 오면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갖고 무슨 법적인 규정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흔히 국민들 사이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잠정수역,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훼손됐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업협정은 한일 간에 어업에 관한 것만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잠정수역이……

○田麗玉 委員 장관님, 저는 어업협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업협정하고는 이미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독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다음에 우리가 잠정수역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중간수역이, 거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독도의 영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EEZ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상 거기를 어업에 관해서 관리할,

규율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거기에 중간수역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장관 말씀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이제 다시 EEZ, 획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합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다시 하려고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EEZ 협상은 또 EEZ 협상대로 해야 됩니다.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400해리가 안 되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田麗玉 委員 바로 그렇습니다.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田麗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들어와서 국제법상으로 볼 때는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근거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국내법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치명적인……

○田麗玉 委員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외교부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치명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EEZ 경계협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업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업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백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田麗玉 委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부는 1996년에 EEZ 설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EEZ 기선으로 삼지 않는다고, 삼는다고 명시를 못 했습니다. 명시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약점을 보고 이렇게 안하무인적인, 이제까지는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일 역사상에 우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쪽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 하고 당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교부가 이렇게 무원칙, 갈팡질팡하는, 또한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냉철하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메구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코타 메구미 사건도 외교부로서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2006년 1월 4일에 이른바 납북자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외교부에도 보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냈습니다. 즉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 김영남 같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달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납북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즉각 답이 와 가지고 일본 외무성에서 2명의 관리가 사흘 뒤에 와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지방을 돌면서 혈액이라든가 DNA 감정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

○田麗玉 委員 누가 댔습니까? 일본 외교부가 댔습니다.

DNA 검사한 비용 누가 댔는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

○田麗玉 委員 아십니까? 그 정도는 외교부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코타 메구미 사건, 김영남 사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요코타 메구미는 일본 측에서 외국에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김영남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비용은 일본 정부가 댔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의 비용을 일본 정부가 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아도 됩니까?

또한 요코타 메구미에 대해서 DNA 감정과 혈액 채취를 했을 때 우리나라 병원에서 그 비용만은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또한 EEZ 문제에 대해

서도 본질을 훼손한다면 국민들에게 외교부가 어떻게 앞으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께서 유엔사무총장 선거운동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2006년도 1월 4일에 외교부장관 앞으로 납북자협의회에서 보낸 서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납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납북자가 우리의 희망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관련국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또 납북자와 관련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애끓는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약이 정부로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가 누구보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회신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 중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납북자가족협회에 회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코다 메구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발단이 요코다 메구미라는 일본 사람으로부터 발단이 됐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았을 때도 필요한 협의를 해 준 일이 있고, 현재 우리 정부 나름대로 필요한 조사를 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해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공문이 있습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 앞으로 납북자가족, 탈북인권연대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4일이고 다음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의 남바 상한테, 미스터 남바한테 보낸 똑같은 공문이 있습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한테 보낸 공문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 답변을 하도 안 해서 납북자연대에서 외교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소식이 희소식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물어봤는데…… 3일 만인 1월 7일 답변을 일본 정부에서는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납북자모임에서 외교부에 항의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의 동북아1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밝힐 수 있지만 개인의 그것을 위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답변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연락이 곧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관께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정 됐습니다.

이어서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위원 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장관께서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 주체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외교부에서 본분을 다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FTA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개방하지 않고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선조들이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운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친미주의자건 반미주의자건…… 저는 용미를 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국을 미워하는 국민이든 간에 우리는 미국하고는 항상 튼튼한 혈맹관계 속에서 동반자의 경제적인 역학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정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를 했던 한·칠레 간의 FTA도 결과적으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

니다. 발효 2년만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49% 늘었고 칠레시장 점유율도 일본을 우리가 앞지르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금융과 농업 보험업 의료 이런데 대한 FTA 과정에서 우리의 대처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미리 시한을 정해 놓고 내년 3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쫓기듯 협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종속될 것이다, 우리가 11대 경제대국인데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미국의 종속경제로 바뀐다는 것은 저는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준비를 잘해서 한미 FTA 협정에 임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 자신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한미 FTA에 관련한 연구를 그동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있는 국가 국책연구소의 서너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미 FTA에 대한 연구·분석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장관님께서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2004년 8월부터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자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정부하고 업계대표 학계 국책연구기관장들과 함께 논의를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국내전문가 연구하고 세미나 공청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중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월 2일 한미 FTA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끝마치려고 했는데 협상기간은 한 13개월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FTA 체결한 것을 보면 EFTA는 6개월에 끝냈고 싱가폴은 11개월, 아세안은 프레임워크 협정 사인한 것을 보면 9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졸속협상이 아니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를 열 차례 해 가지고 전문가 연구나 세미나 공청회를 진행해 왔고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예비협의를 세 번 계속 했었고 저 자신도 통상장관회의를 여섯 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슈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 13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물론 시간이 더 길면……

○김혁규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좋겠지만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킬 것입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만약에 안 지켜지면 한일 FTA처럼 이것도 우리가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총리께서 벌써 한 번 말씀하셨는데 쌀이라는 것은 국민정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또 반면에 교육서비스 분야나 아니면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이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께서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상호간에 윈윈이라는 차원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혁규 위원 한미 FTA는 미국이 워낙 경제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업 보험업 의료산업 농업분야 이런 여러 분야를 볼 때 FTA 협상 이전에 국내 합의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국내 합의는 농민들과의 합의, 의료업을 하고 있는 의료업과의 합의…… 지금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들어오는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반대가 많고 시끄럽습니까? 이런 국내 합의 그리고 미국과의 합의 이 두 가지 초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내 합의가 전연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나 자유무역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 같은 경우 국내보완 대책은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보완대책도 중요합니다. 보완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350만 명에 120만 가구입니다. 그중에서 60%가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그중 한 30만 가구 정도는 재산세가 5000원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농민연금제도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데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어제 한명숙 총리지명자께서 쌀은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총리지명자께서 하신 말씀하고 통상교섭본부장님의 생각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총리께서 지적하신 것이나 아니면 한덕수 부총리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저나 말씀드리는 게 일치합니다.

전에 다자 차원에서 2014년까지 우리가 쌀을 예외로 받아놓았고 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정서를 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와 똑같은 내용으로 외신하고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실었습니다.

○김혁규 위원 답변하는 분이 너무 답변을 오래 해 가지고……

질의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전여옥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어업경계 획정하고 EEZ 경계 획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경계가 없는, 주인이 없는 구역의 영유권 문제가 나올 때는 때로는 연고권을 많이 주장하게 되는데 이미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으로 된 입장에서 누가 논리적으로 명분적으로 입심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경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빌미를 어업협정에서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는 것이 외형상으로 보면……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어업협정은 어업 관계만을 위한 것이고 어떤 영유권이나 이런 것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점을 우리 협상과정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 분명히 밝혔고 독도에 우리가 영해를 다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있는 부분이, 어업협정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오해가 안 풀리는 자체가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니까 오해가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여하튼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저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독도 문제부터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우리 EEZ 수역을 수로 측량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영토분쟁화를 해서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할 때는 결국 질 수밖에 없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입시켜 놓고 보면, 현재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한국 정부는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싸움을 그쪽에서 걸어왔을 때 싸움을 하면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특히 그 싸움에 있어서 외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총을 안 든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외교전에 있어서 야전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통상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그런 야전사령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야전사령부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본 진영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태가 지금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에서 4월 13일 관보에 수로 측량 계획임을 게재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사전에 의견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 정부에서 IHO에 통보를 하고 수로탐사를 하겠다,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 4월 14일……

○이성권 위원 4월 14일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관보 게재가 13일인데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전에 전달해 온 바는 없고요.

○이성권 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이성권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야전사령부의 하나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내에 있는 한국대사관은 해상청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전후부터 해서 급격하게 독도 문제를 일본이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시마네현에서 독도의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의 태도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4월 당시에 주한 일본대사였던 다카노 대사가 또 독도와 관련된 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문제도 기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3월에 문부성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를 명기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듯이 작년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독도 문제를 거론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집중적으로 정보수집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4월 13일 관보에 게재하고 4월 14일 통보를 해 오기 전까지 우리 외교통상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일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해 왔고 다음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주일 대사관에서 어느 정도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관보에 게재한 정확한 시점은 몰랐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4월 14일에……

○이성권 위원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IHO에 고지를 한 다음에는 바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사전에 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그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 의연한 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후약방문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항의를 한들 그것은 일본 측에서 이미 일을 벌이고 난 다음이지요. 그래서 그전에 뭔가를 알고 사전에 대처방안을 미리 내놨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 없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는 항상 단호한 대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도 연관되어 있는데 어쨌든 독도는 우리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하여튼 사전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대처방안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일본 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문부성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명기하라고 지시를 내렸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이성권 위원 이번에 해상보안청에서 수로 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본의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개입해서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일본 정부의 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계속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것이 한일 간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상당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때에 연유된 문제를 아직까지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이성권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항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전략이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에 입각해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적 대응을 내야 되는데 그 전략적 대응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배부한 자료에 보면 일측이 탐사계획을 자진 철회토록 외교적 압박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외교적 압박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외교적인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 압박을 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너무 이렇게 외교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자꾸 이렇게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외교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지요.

○이성권 위원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배부한 자료에 압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제까지 그런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 일본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외교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만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했을 때는 싸움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외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과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러한 역사인식이라든지 일본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도 죽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마는 이러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좀더 우리 입장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 여러 가지가 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의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성권 위원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권 위원 잠깐만요.

일단 됐습니다. 일단 됐고 다음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고 싶은 것이 일본이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는 오키노도리가 수면 위에 1m 정도밖에 안 나온 암초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섬이라고 규정하고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에 대응하는 방식과는……

일본은 아주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중국과 연대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와 독도 문제를 엮어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중 잣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어떤 제3국과 연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사안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코다 메구미, 그리고 김영남, 김혜경 혈연관계와 관련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DNA라든지 각종 샘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원래 국과수인데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국과수에서 해 가지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제가 지금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성권 위원 대략 관례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부가 직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성권 위원 대충 생각했을 때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실 수 없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제가 그 내용이 언제쯤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본 측에서 요청하기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장관급회담이 열리지요? 거기서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도 제가 통일부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세 사람의 혈연관계가 확인되었을 경우, 국과수에서 결과가 확인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측에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의 책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남북 장관급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것도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 가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러한 납북자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책무를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는데 제가 더 추가질의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문제, 또 이번에 독도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위한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수로 측량 계획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은 대단히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최근 일본의 이러한 패권주의적 행태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평화적인 폭거임과 동시에 저는 21세기 외교전쟁의 시대에 외교적인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사안이 대단히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기존의 분리적인 접근, 그리고 조용한 외교는 폐기하고 종합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리면 어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외교부장관도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여하셨는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여해서 실제로 유사시 군사적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제가 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최성 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부가 취할 단계적인 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성 위원 단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유사시 사태가 진전됐을 경우에 국방부장관과 합참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성 위원 유사시 나포도 불사하겠다는 이러한 대응전략도 마련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신문에서 확대해서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했는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부가 먼저 대책을 내놓고 협조를 구할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책이 오늘 통외통위에 보고된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적 합의와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참여, 협력이 중요한 차원에서 박근혜 대표의 오늘 청와대 회동 참여를 설득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외교적인 중요한 사안, 또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지대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초당적인 외교가 필요하고 그러한 견지에서 대통령께서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고 그러한 대책을 논의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표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다는 이런 보도를 보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초당적인 지지와 협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혹시 야당에서는 대변인 논평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독도 문제나 이런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우려와 함께 참여정부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안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부가 이러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자체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해서 어떤 외교정책을 세운 적은 결코 없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 일본 외교부의 내부문서가 유출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 위원 기존의 독도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가 만든 매뉴얼이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 해서 독도 우발사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EEZ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의 대응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와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과 별도로 NSC 차원에서 EEZ 매뉴얼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최근에는 제가 그 문제를 협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라든지 지난주 회의에서 지금 해양탐사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최성 위원 그러면 독도 관련 기존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논의했거나 협의했거나 작성한 EEZ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기관리센터에서 만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EEZ나 독도 이런 것이 대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EEZ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성 위원 뒤에 계신 관계자한테 지금 좀 확인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현재 이러한 EEZ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외교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독도영유권 분쟁을 위한 수로 측량 계획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리해도 문제, 그리고 기존의 매뉴얼로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지금 예상되는 불상사나 일본의 예상되는 대응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상정해서 죽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왕왕 상황

이 변경되면서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의 수로 측량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련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유사시 이번 사태가 진전될 경우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거나 또는 추방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이 진전되어 가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성 위원 당장의 대책은 아닌데 독도 본부에서 아마 다소의 감정적 접근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서 영토사수선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 독도를 직접 방문한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 기억에 역대 대통령이 가신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영토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독도가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한 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

○최성 위원 참여정부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서 우리의 영토권 사수에 대한, 국민주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일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이제 긴박한 상황이 제기되니까 해양경찰청이 5000t급 삼봉호를 급파하는 이런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 독도를 관리하는 전용 선박조차 건조된 지 16년이 지난 아주 낡은 선박에 불과하다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독도 전용 관리선을 좀더 최첨단으로 해서 정예 형태의 이런 경비정으로 전환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일본의 예상되는 도발 진전 시 나포 등 이런 강경책도 불사한다는 이 방침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는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진전되는 것을 상정해 가면서 세우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우선 노출되는 경우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지 않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상황의 진전이라든지 징후, 진전의 징후를 봐 가면서 그때그때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 사안에 관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진전될 사항에 대해 미리미리 예단해서 하는 데는 지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 위원 일본의 총리와 일본의 장관들은 망언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영유권 침탈은 물론이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패권주의적인 망언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의전이나 관례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선과 검색 또는 나포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단호한 방침을 천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상대방이 그러한 언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꼭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성 위원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측도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남북이 공동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용의나 그런 부분들을 통일부와 협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문제는 통일부장관하고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성 위원 한 가지 질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영우 수석대표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종석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6자회담이 난망,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워싱턴타임스 등 미국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불참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계좌라고 판단되는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이런 워싱턴타임스의 보도내용이 있는데 동경 모임에서 힐 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천영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천영우 사실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일단 북한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서방에 있는 모든 은행은 BDA 사건 이후 미국의 요청이 있든 없든 간에 각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북한 계좌를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대북 금융제재가 6자회담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6자회담에 대한 방침이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천영우 그렇게 꼭 연결시킬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BDA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이기 때문에……

○최성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독도 근처를 탐사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까 장관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국내법·국제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법상에는 해양과학조사법에 나포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인근 20해리까지 탐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포에 관해서 어떤 레드라인이 존재합니까? 어제 장관대책회의 하시다가 이런 레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어느 시점까지 들어오면 나포할 계획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지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문헌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문헌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느 선 안에까지 들어오면 방어벽을 치고 어느 선까지 들어오면 나포하겠다는 계획도 있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것은 대개 해경과 국방부, 합참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협조를 하셔야겠지요. 어제 장관님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보고에서도 보고하신 대로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서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검정 의견 제시" 이러면서 독도에 대해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나왔데 이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기존의 입장이랑 달라진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아주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작년에는 일본 문부성으로서는 검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을 제가 강력히 지적을 했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고유영토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의 일본의 독도 문제를 보면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고 있었지만,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어업자원 확보를 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의 무주지 선점론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이번 중앙정부 주도하에 고유영토 부각은 경제적 측면이 정치적 측면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주장이 고유영토론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신데요.

하여튼 1905년에 이게 무주지였다 편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고유영토다 이런 것은 상호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정문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유영토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이 점인데 그 맥락에서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분쟁, 불법점령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 평화선에 의해서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본이 지금부터 교과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의 고유영토를 불법 점령하면서 재판받자고 해도 비겁하게 거부하는 아주 파렴치한 나라라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테고 이번 독도 문제가 또 얼렁뚱땅해 가지고 넘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일본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점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과거의 2차대전이나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모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교육에 의거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어떡하든지 분명히 마감을 짓고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대북지원도 빚 얻어서, 국채 얻어서 하는데 무슨 전략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좀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 얼렁뚱땅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후손들에게 똑같은 빚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더러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처리하라고 떠넘기는 그런 행태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어떡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가 암초입니까, 도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 유엔해양법에는 어떤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요건으로써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유엔해양법 제121조에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 나왔던 게 99년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문헌 위원 이 당시에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으로 보고 독도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는 남한 면적 절반에 해당하는 방대한 바다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독도를 암초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어찌된 사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판례, 사례 그다음에 협상 여러 가지……

○정문헌 위원 일본이 지금 최남단에, 아까 전 여옥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인도인 오키노도리시마에다가 3000억 엔을 퍼부어서 인공구조물 만드는 엽기적인 행동하면서 자기네 EEZ로 인정받으려는 아주 기괴한 행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도서로 봐서 거기서부터 자기네 EEZ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암초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검토할 때에는 기점 문제 발생 없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독도의 영유권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이미 독도가 우리 측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협상에 여러 가지 유리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런 것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정문헌 위원 정부가 말씀하시기는 독도와 12해리를 영해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만 신한일어업협정 전문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없고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맺은 협정이나 조약이나 어떤 문건에서도 EEZ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조약이 신한일어업협정 빼놓고 또 있습니까, 없지요?

EEZ에 관련된 것으로써 이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한일 간의 중간선에 대해서 결정을 못 본 상태에서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중간·잠정 수역으로 보는 그런 측면으로 이 어업협정이 유효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잠정수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간수역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어업협정이 없으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의 어업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일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문헌 위원 우리 중국과는 서해에서 50년 동안 그런 협정 없이 어업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처음 맺어졌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한중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정문헌 위원 중국이랑은 50년 동안 그런 것 없이 서해에서 조업했지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수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양국 어느 쪽에든지 속해야 될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그 안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권고에 따라 각자가 자국의 법을 자국민에게 적용하여 어업자원과 보전·관리를 실시하게 되는 구역을 얘기를 하지요? 지금 중간수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구역을 우리 정부는 중간수역이라고 그러면서 그 성격을 공해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측은 이를 잠정수역 내지는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면서, 중간수역에서 중간적은 지리적이나 시간적으로 가운데 있다는 말도 되고 권리에 관해서 가운데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일본 측이 지금 사용하는 잠정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법협약상 해양 경계획정이 어려운 곳에 잠정적으로 설치한다는 뜻이고 잠정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한일공동위원회,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한일공동위원회 결정 또는 권고에 따라 어자원을 공동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협정에는 어떤 중간수역이라든가 잠정수역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말은 없고……

○정문헌 위원 양쪽이 해석하는 게 다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문헌 위원 어느 해석이 굉장히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저는 우리 정부가 그때 당시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맞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중국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우선 중국과는 국교가 92년에 수립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업협정이……

○정문헌 위원 국교가 없어서 그렇게 마찰이 많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어업협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땅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넘어가면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전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일어업협정을 보면 3년 동안 기간이 끝나서 새로 할 수 있는, 제16조에 보면 3년간 효력이 지나고 이후에는 어떤 일방 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상대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제주도 7광구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문헌 위원 장관도 잘 아시고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밑에 대륙붕은 한일 공동관리로 돼 있는데 위에 수역은 그때 신한일어업협정하면서 다 일본한테 내줬어요. 일본이 우리가 개발하자고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가만히 두는데 한 20년 지나면 대륙붕협정 다시 해야 되지요? 이때 잘못하면 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현실은 신어업협정 합

의의사록 제2조에 보면 일본이 제3국—이것 중국을 의미합니다—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 정부에 대해 협력할 의향을 지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주도 남쪽 우리 공동수역, 중간수역이라고 돼 있는데 중국도 겹쳐진 데 우리가 들어가서 조업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구축한 어업 질서 하에서 일본의 안내를 받으면서 중국의 선처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이런 부분부터 분명히 해서……

그리고 지금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이 협정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협정문의 제15조를 보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아니된다,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업 관련 사항 이외에는 아무 국제법적 효력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이 어업협정으로 일본의 독도와 주변 12해리에 대해서 한국이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 다시 하면서 정말 이번 차제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도 국내법·국제법에 따라서 나포까지도 불사하시겠다는 그런 단호한 자세를 보이셨는데 후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이번에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정의용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를 좀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미관계 또 한일관계의 상황 진전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교의 대가이신 반기문 장관님 앞에서 마치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큰 외교적 현안이 계속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대외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의 위상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견제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큰 관점에서 선진국으로서 또 경제대국으로서 외교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에 가셔 가지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 이런 것들이 선진 외교로 나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반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외교에는 명분과 실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모두 다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일관계를 보면 명분과 현실, 가치와 실리 간에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일관계는 굉장히 건강하게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일 1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고 교역량은 1일 2억 불을 초과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라든지 영토 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명분에 더 가까운 문제들인데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따라서 장관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과 냉철한 대응을 어떻게 균형되게 잘 조합해서 대응하시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가 해답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외교통상부 전문인력들의 우수한 인력을 제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과 냉철한 대응 사이에서 적절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단호한 대응일 경우 정부가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일본 정부 소유의 선박을 나포해서 그것이 국제해양법재판소로까지 발전해서 독도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국제 분쟁화하도록 할 것이냐, 또 지나치게 냉철한 대응을 하다가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퇴색하게 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점을, 양쪽을 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 있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가 제1기 때보다는 다소 바뀐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1기 때는 9·11사태 이후 테러 예방에 급급한 나머지 일방주의적이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2기에 들어와서는 제1기 때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론이 제기되면서 가치 중심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또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외교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행정부가 추구하던 가치의 개념이 종전의 추상적인 개념, 가령 인권이라든지 개인적인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마약 밀매라든지 무기의 밀매라든지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라든지 또는 위조지폐를 발급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적인 국제 범죄행위의 근절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이러한 포괄적 가치 개념에 대해 양국 간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 간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미관계를 다시 한번 잘 고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할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이라든지 또는 대외정책의 힘이 많이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미 FTA에 관해서 김현종 본부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혁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김혁규 위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한을 정해 놓고 졸속한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또 다른 하나는 스크린쿼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협상에서 딜을 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사전에 다 미 측에 내줘 가지고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우리 협상력이 이미 저하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혁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흡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자 면제 협정이, 미국과 소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FTA와 함께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을 포함한 김현종 본부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속 부분하고 미국에 흡수되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것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FTA 추진 로드맵은 2003년 8월부터 만들어 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구검토가 됐었고 지금까지 전문가 연구가 우리 부서를 합쳐서 인하대학교, 전경련, 무역협회, KIEP하고 농촌경제연구원 해 가지고 모두 13번이나 실시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부터 우리는 미국과 14번, 분기별로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적재산권의 이슈나 아니면 검역 이슈나 관세인하, 무역장벽에 대한 이슈를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부터 13번에 걸쳐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는 한미 FTA 예비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슈들이 어렵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것인지 이것도 역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2005년도에 저하고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하고 여섯 번씩이나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FTA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인하와 철폐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와 투자이고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8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미국과 계속 협의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더 토론해야 되는 건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투자 관련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가 한미투자협정을 협상하면서 서비스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한미투자협정은 결국 체결이 안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WTO DDA 차원에서, 다자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는 4년 전부터 우리가 협상을 해 온 것입니다.

관세인하하고 철폐 계획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또 여러 개의 FTA를 통해서 우리 협상팀이 많은 경험을 쌓아 놓았고 그뿐만 아니라 역시 WTO DDA 차원에서, 다자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개월의 협상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FTA 끝낸 것을 보면 싱가포르 11개월, 그리고 아세안 9개월, 그리고 EFTA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중동국가들과는 4개월 내지 6개월 또 모든 FTA를 12개월 만에 끝마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임종석 답변 다 됐습니까? 조금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리고 사전, 4개 현안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대리 임종석 아까 김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외의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4개 현안까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선 미국 국회 보고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의신청해 가지고 미국 국회 보고서에서는 바꿨습니다. 이 4개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양보한 게 아니다, FTA하고 연계돼 있지 않다고 우리가 미국 쪽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미국 국회 보고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에 대해서는요, 소고기는 우리가 WTO 회원국 입장으로서 WTO 검역협정에 따라야 됩니다. 거기 제3조제1항에 보면 우리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 보편적인 국제 기준은 30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개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뼈를 우선 뺐습니다.

뼈를 뺀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광우병에 의해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8억 5000만 불 어치를 수입했는데 67~68%가 뼈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또 더 위험한 부분, 더 나아가서 내장하고 햄버거 고기하고 차돌박이까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또 마침 그때 한미 FTA가 있는 시기에 이 소고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치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보시면 아시아 국가에서 그 2~3주 안에 일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소고기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 거고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것의 기준을 어디다가 잡았느냐면 어느 나라 국적을 떠나서 1만 대 미만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예외를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연비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 대 미만으로 했었고 자동차번호판을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바꾼다니까 자동차 1만 대 미만을 수출하기 위해서 라인을 바꾸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도 1만 대 미만으로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이것은 우리가 환경기준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2년간의 유예를 주는 겁니다.

참고로 200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101억 불 수출하고 1억 불 수입을 했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만약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분야에서 이것을 하이닉스 반도체처럼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 부과를 하면 그것은 수출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잘 알겠고요.

아마 한미 FTA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하고 독립된 사안으로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또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오늘……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것에 대해서 지금 통상교섭본부에서는 계속 한나라당 초선의원들과 모임이 있었고 또 우리당의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하고 계속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진행이 되는 대로 늘 자료를 통외통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정의용 위원님께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오전질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상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FTA가 제일 큰 관심사로 논란이 많은 분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개방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계 각국이 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미 FTA는 다른 FTA하고는 달라서 대한민국의 향후 50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철저히 준비해서 국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대책 마련이겠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짧게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언론을 통해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설명은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입니다. 미국은 사실 베테랑 아닙니까? 21년간 15개 국가, 9개 FTA를 체결했고 NAFTA와 같은 중량급 FTA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2년간 6개국에서 3개의 FTA, 경량급만 경험을 했다…… 그래서 경량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의 복싱경기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합니다.

경험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이거든요.

장관님, 그런 지적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실은 미국이 세계의 최대 경제국이고 또 통상 면에 있어서 공세적인 입장에 있었고 우리는 좀 수세적인 시장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상 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협상력이나 외교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0여 명의 스태프들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전부 다 영입을 해서 준비하고 했습니다.

○신기남 위원 결국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기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준비가 되어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되어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전망치가 부족해요. 당국에서 내세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같은 것은 대개 낙관하는 보고서만 나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좀 신중하게 전망한, 예를 들면 같은 연구원의 방호경이라는 연구원이 쓴 보고서…… 방호경 연구원의 보고서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다가 하루만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김 본부장님은 그 보고서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봤습니

다.

○신기남 위원 그런데 하루만에 게재가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신 위원님, 그게……

○신기남 위원 빨리 좀…… 내용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뭔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방 연구원의 페이퍼 내용은 원산지를 잘 협상해야지만 우리 수출이 는다는 포인트인데 그것이 언론에서 잘못 픽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운시킨 것입니다.

○신기남 위원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운시킨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방 연구원의 핵심 포인트는 원산지 협상을 잘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졌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신기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논문이 언론을 통해서 잘못 알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였기 때문에 삭제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고요.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인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신기남 위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죌릭이었는데 그 사람은……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죌릭은 지금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신기남 위원 부장관으로 갔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신기남 위원 그때 제가 갔을 때부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의용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개방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포트먼 그 사람이 김현종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이 요구해 온 통상현안을 현저하게 해소하는 것이 미국이 향후 FTA 협상에서 기대하게 될 타협을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시험지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리트머스시험지라고 보기보다도 지금 현재 통상현안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흘린 게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지만 FTA 차원에서도 옛날 BIT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남 위원 리트머스시험지라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가 FTA를 할 수 있는 관건이다 그런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과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문제를, BIT 때부터 못 했던 것을 해 놓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면 우리의 4대현안 수용, 그것은 오비이락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4대현안이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 같은 경우는……

○신기남 위원 글쎄, 알겠는데…… 아까 다 들었어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사전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1만 대 미만 수출을 해 가지고 했고요.

○신기남 위원 글쎄,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소고기 같은 경우 건강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 스크린쿼터는 우리가 경쟁력을 비추어 봤을 때 스크린쿼터가 98년도부터, 외환위기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기남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전조치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신 위원님, 만약에 한미 FTA 들어가기 전에 스크린쿼터를 해결 안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또 똑같이 BIT처럼 해결이 될까봐 이것이 한미 FTA 때문에 촉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기남 위원 미국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이것은 우리가 둘 다 우려했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것의

완전 철폐를 요구했었는데 우리는 146일에서 73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신기남 위원 지금 그런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선결조건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 때문에 촉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기남 위원 그러나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 쪽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 때문에 촉진이 됐습니다.

○신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스크린쿼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하실 때 1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축소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외교부와 문화부 간에 별도 협의는 없었지요? 그렇게 저한테 서면보고가 왔는데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문화부하고는 계속 우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기남 위원 아니, 1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때 사전에 문화부하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문화부하고는 계속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전에 했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우리가 계속……

○신기남 위원 협의가 없었다고 저한테 보고가 와 있는데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롯데호텔에서 민간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해요.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신기남 위원 모든 경제단체들하고 관련 업계, 연구소가 다 모여서 민간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협상 창구가 만시지탄이지만 마련된 것은 희망적인데 민간대책위원회 출범에 당국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신 위원님, 그것은 무역협회 위주로 해서 출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FTA를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신기남 위원 당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대책위원회가 지지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반대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이 워낙 여러 개 많이 출범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신기남 위원 그러면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지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반대하는 NGO 단체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 데를 만나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경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법안이 발의됐어요.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내에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법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관계를 잘 가지기를 바라고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 또 특별위원회 구성되기 전이라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세히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홍보가 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신기남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게 그게 부족하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촉발된 것이고 아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경 써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에도 개인 위원님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보좌관님들한테도 계속 설명드리고도 있고 또 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른 통상현안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 가면서 브리핑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여러 차례 보고하실 때 앞으로 통상 협상은 선대책, 후협상 기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거기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섬유와 가죽류, 신발 등 일부 고관세 품목은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얀 포워드(Yarn Forward)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원산지규정이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것은 섬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산지규정에 관한 문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만약 우리가 중국에서 원 섬유사를 가져와서 여기서 옷이라든지 가공 판매하게 될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그게 아주 제한적인 원산지규정이라서 그것은 사실 우리의 큰 협상 대상 중 하나입니다.

○권영길 위원 어쨌든 지금 미국의 얀 포워드에 따르면 만약 이게 적용되면 미국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섬유사를 가져와 가지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원사요.

○권영길 위원 예, 원사…… 옷을 만들었을 때는 이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 원산지규정이 변경된 예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우리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얀 포워드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받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왜냐하면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이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섬유제품은 전부 중국에서 원사를 가져와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사가 제공된 것뿐만 아니라 옷도 다 그렇거든요.

중국에서 원산지규정 때문에 우리의 섬유제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면 크게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얀 포워드라는 원산지제도가 우리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원사 기준이 아니라 봉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길 위원 시간 때문에, 서면질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제조품은 모르지만 섬유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얀 포워드제도 때문에 혜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원산지규정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면답변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통상교

섭본부장께서 우리 제품을 수출할 때 섬유류가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얀 포워드제도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섬유제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원가요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산자부에서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섬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제품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쟁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임금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율, 섬유제품이 10%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섬유에 대해서요? 가중 평균치가 13.9%입니다.

○권영길 위원 어쨌든 관세율이 되더라도 중국과의 경쟁이 안 되는 주된 요인이 정부 논리대로 따르더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임금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미국에서 관세율 폐지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섬유 및 기타 여러 제품에 대한 경쟁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원가 분석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 있을 테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섬유나 의류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2년 동안 쿼터에 대해 어느 정도 그것을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권영길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도에 관해서는 명확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이것 하나 하니까 벌써 반 정도가 가 버렸네요. 저도 간단히 물으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부분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방송,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부문입니다. 이 부문이 협상 의제에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요청을 다자 차원이나 양자 차원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방송 부문에 대해서는 FTA 협상 의제가 아니다, 들어간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방송 부문 등이 한미 FTA 협상 의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교육, 의료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교육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고 성인교육 차원에서만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영길 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바로 질의할 부분이거든요.

김종훈 수석대표께서는 초·중등 등 교육 개방, 교육과 의료 개방은 의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초·중등만 아닙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등을 제외한 것은 개방의 대상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개방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성인교육 차원에서 성인교육 그런 것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의무교육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개방한다면 우리 교육 제도 전체를, 의무교육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초·중등 이외 고등교육은 개방의 대상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대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권영길 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검토한 다음에 그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장난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초·중·고 이외,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의무교육 대상 이외의 교육과정은 개방 대상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빼놓고는 그쪽에서 개방을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이고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외교통상부 유명희 FTA 서비스교섭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과 의료 부문 개방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았다' 앞으로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의료 분야 같은 경우도 위원님 우리가 모든……

○권영길 위원 의료 부문은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우선 교육 부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청받은 적도 없고, 제가 몇 번이나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것은 개방 대상이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육 근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권영길 위원 문제는 초·중등만 개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냐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것은 만약에 요구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개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여기에는 공청회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2월 2일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2월 2일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청회도 외교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그 공청회가 중단이 되고 무산이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월 2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추진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교섭본부장은 1월 29일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권영길 위원 이 절차 규정에 공청회는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안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미리……

○권영길 위원 아니, 나타난 것을 보면 2월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단 한 겁니다.

○권영길 위원 미리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긋났고요.

그다음에 그날 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9일 워싱턴에 가 있었고 한국 날짜로는 2월 3일 새벽이 되지만 사실상 2월 1일 밤 지나서이고,

그때 미국과 합의해서 미국에서 개시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 전부 다 무시한 거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절차상에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 공청회가 도중에 무산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리 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대외경제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결정을 바로 받고서 거기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가 있었던 거고요.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FTA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지금 다른 분들과의 균형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질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미 FTA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하는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분위기이고 저는 반대이니까 그 균형도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 임채정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런 균형은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독도 문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이 자동 연장이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연장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효화 선언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기준 적용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회의 끝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위원 김원웅입니다.

장관님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도발 관련해서 여야의 지도부 그리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초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웅 위원 그 자리에 장관님도 함께 가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오늘 저녁 때는 저는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김원웅 위원 그런데 그 모임에 초청을 받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서 정부가 먼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초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구·경북에서 정책 투어 일정도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정부가 독도에 관한 명확한 입장, 지금 밝히지 않은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관련 장관들과 여러 가지 대책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으셨고 일단 정부의 입장을 결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린 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 대표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내일 결정을 하실 걸로 이렇게……

○김원웅 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모습도 보이고 여야가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대내외적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웅 위원 그런데 외교적으로 미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선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 특히 더구나 당내 일정 때문에……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일정 운운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드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대통령님께서 정당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시고 싶다, 그다음에 국민적인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계셨던데 참석을 못 하신다는 보도를 보고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웅 위원 사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

제 박근혜 대표께서 서초동 어디에서 한나라당의 로고송을 녹음했다 그러는데 저는 로고송 녹음할 시간은 있는데 독도 문제 대책할 시간이 없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당 대표의 편협한 당파적 시각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웅 위원 그런데 사실 EEZ 선포를 할 때 일본의 경우에는 독도 기점으로 서쪽으로 200해리를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울릉도와 오키제도 중간선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김원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국 간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정한 태도를 취하는데 일본은 거꾸로 독도 기점 서쪽으로 200해리를 요구하는,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 외교의 태도가 EEZ를 독도 기점으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 EEZ 경계 획정에서 우리가 독도를 EEZ 경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에 암석인지 여부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에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협약 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 또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오키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독도를 우리의 EEZ 기점으로 삼을지 여부는 단순히 유엔해양법협약의 물리 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 타국의 사례, 일본의 교섭 태도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웅 위원 암초냐 섬이냐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나무와 풀이 자라느냐 또 최소한 2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웅 위원 지금 독도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또 현재 김성도·김신열 씨 부부들이 경제활동으로 어로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 이전에도 최종덕 씨나 조준기 같은 분들이 1965년부터 상주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국제법에 암초나 암석이 아닌 섬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거주가 가능한 섬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우리가……

○김원웅 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해 주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고 또 어떤 교섭전략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또 판례라든지 앞으로 일본의 교섭 태도 이것을 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웅 위원 사실 그동안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용한 외교 그리고 일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조용한 외교가 때에 따라서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독도는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본의 그러한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조용한 외교니 또는 분명한 영토주권의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는 대마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영토분쟁의 맞불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마도는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정부에서 영유권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보면 '대마도는 신라 국가와 같은 곳이었고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모두 신라와 다

름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 고려 때는 대마도주에게 만호 벼슬을 줘서 속방으로 삼았고 조선왕조 때는 세종 원년에 왜구를 정벌하고 대마도를 경상도로 편입시켰고 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해서 조선왕조의 모든 공식지도에 예외없이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기돼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 일본의 풍신수길이 만든 군사지도에도 대마도를 조선과 함께 공격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가 지금 대마도에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일본은 지금 대마도를 어떻게 주장했을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마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맞불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채택했을 때 제가 우리 정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일본의 분쟁지역화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되 일본의 도발 시에는 아주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웅 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냉전시대에 북한의 남파공작원에 의한 납북자들이 있었고 또 남한의 북파공작원에 의한 납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상호 희생자 중의 1명이 바로 김영남 씨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속에서 분단국가의 고뇌가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납북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일본의 수구세력들과 함께 뇌화부동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저께 일본의 동경대학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는데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한 납북자가족집회가 있으면서 한국의 납북자 가족들이 거기에서 함께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일본의 극우세력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본이 메구미 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한데 사실 일제강점기간, 일제에 끌려간 아직도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수십만의 메구미가 아직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내의 일부 균형감각을 잃은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부로서도 납북자나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구미 씨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관련 확인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로서의 여러 가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김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FTA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FTA가 경제적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기회의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졸속하게 진행될 경우에 엄청난 역효과, 국가 생존의 위기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분명히 FTA가 필요하고 시작은 해야 되는데 시기에 얽매여서 졸속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제가 동의했고 어저께 기자회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웬디 커틀러 협상대표가 주한 미국 기업인 대상 연설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아시아에서 또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말레이시아입니다.

○남경필 위원 말레이시아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말레이시아는 3월 8일 발표했습니다.

○남경필 위원 일본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제 개인적인 의견이요?

○남경필 위원 예.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일본은 지금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시작도 못 한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는 2개의 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저지하는 FTA 저지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됐고 또 한쪽에서는 바른 FTA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2개의 다른 입장을 가진 운동본부가 발족이 됐는데 저는 정부가 이 2개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분들의 에너지를 협상에 적절히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도 홍보 차원에서, 국민 설득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외국 협상기구이기는 하지만 국내 홍보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EEZ 사건과 관련되어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수로조사를 할 경우에 정선·나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국제법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해양법하고 만약에 우리 EEZ 내로 동의 없이 들어오면 우리 국내법도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데 국제해양법이 뭡니까? 한일 간에 서로가 주장하는 EEZ에 대한 합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EEZ를 공인해 주는 국제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1996년에 해양법 규정에 따라서 EEZ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서 이미 유엔에도 통보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한일 간에만 그것이 획정이 되지를 않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나 우리가 96년도에 방침을 발표하면서는 독도를 EEZ 기선으로 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EEZ 협상을 중단해 놓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남경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해양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국제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이 조사를 하려는 수역은 아주 분명한 우리의 수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국내법에도 위반이고 국제법에도 위반입니다.

○남경필 위원 국제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이미 해양법 회원국이고 해양법을 다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남경필 위원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업 외에는 체약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거꾸로 해석하면 이것이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입장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의 해석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고요. 15조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더욱더 명백하게 한 것이다 이런……

○남경필 위원 외교라는 게 우리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국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는 사실 한일 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양국이…… 특히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본다면 우리 입장만 계속 되풀이해서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면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독도에 관한 우리의 영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 보고 또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우위에 있고 떳떳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감정적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러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위원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원칙을 선언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한 후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앞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한 것과 한편 이 정부 들어서 대일관계에 있어서 너무 온탕냉탕식,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2004년 7월에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기자회견 해서 냉기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놓고 한 8개월 지나고 나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2005년 3월에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초강경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남경필 위원 저는 일본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을 초기에 너무, 아무런 것도 얻은 것 없이 일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한 문제라든지……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변화에 따라서 처음에는 2004년 1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우표 발행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그냥 일본 정부에 독도영유권 주장 자제 요청 정도로 끝났습니다.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했지요.

그러다가 대통령의 이런 입장변화가 있은 이후부터 굉장히 강경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또 주일대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오히려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고 일본의 의도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을 분쟁화시키고 문제화하는 데 앞장서는 듯한, 그래서 원칙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왔다갔다 했습니다. 온탕냉탕식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입장을 많이 바꿨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원칙이나 입장표명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크게 중하게 여겨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원칙과 외교적 노력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발 왔다갔다하지 말고 같은 입장을 견지해 달라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다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EEZ 분쟁뿐이 아니라 어업권, 해저자원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종합적으로 얽힌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쇼나 일회성 쇼로 했다고 보지 않고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

○남경필 위원 그런 준비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 온 것이 일본의 여러 가지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일본이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다만……

○남경필 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 걱정이 좀 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EEZ 협상이 지금 중단이 됐는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EEZ 협상을 다시 재개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미 간에 동맹이 위태롭다, 느슨하다,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 오히려 일본은 이러한 한미 간의 균열을 자신들의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독도 도발을 하는 호기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동맹 문제를 더욱 굳건히 해서 일본이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반기문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엔 사무총장 되시기 위해서 지금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아는데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영향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하여간 실제 영향력을 가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꼭 받으셔서 지금 하시는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감사합니다.

○정몽준 위원 독도 문제를 오늘 아침부터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우리 정부에서 표방을 하시는데 떠들썩한 외교보다는 조용한 외교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것 이상 더 바랄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용한 외교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성과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독도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에서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외무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내 부인을 다른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그것을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같이 살면 그것으로 되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자꾸 다른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길 가는 보통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경제대국이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용한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일본이 우리 외무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서 접안시설 공사를 중단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내정간섭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정간섭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국가 간에 전쟁선포 다음으로 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외무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조용한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공식으로 내정간섭이라고 발표하고 외무부는 조용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좀 결여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조용한 외교가 성공하려면 우리의 합리적인 태도가 상대편한테 인정을 받고 상대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이러한 현안들을 처리할 때 조용한 외교가 될 텐데요. 상대편이 우리의 이러한 합리성 내지 인접국가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나 무력함으로 인식을 하게 될 때는 조용한 외교는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 문제 얘기가 나오면 저도 매번 상당히 궁금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침에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독도 문제와 관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장관께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에는 EEZ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업협정 1조에는 '이 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통해서 장관께서는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 일본이 그렇게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가령 일본이 정부 발표대로 수로탐사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무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밀어내고 나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러한 상황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피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대편에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한일 간의 신어업협정이 독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간의……

○정몽준 위원 정확하게 하면 99년 1월이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지요.

양국 간의 경계획정 이전의 어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EEZ 경계 획정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서 또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도 관계가 없고 해양과학조사하고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일 간의 EEZ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일본이 우리 측 수역에서 무허가조사를 하려고 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업협정과는 관계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EEZ 경계 획정이 안 되어 있고 2000년까지 4회 협상을 하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EEZ 협상은 계속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남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아침부터 조용한 외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사실상 정부가 '조용한 외교다'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표방한 적은 없습니다.

○정몽준 위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리고 조용한 외교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법상 우리의 권리를 묵인해 온 적이 없고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냉철하게 대응을 잘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위원 장관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업협정은 독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말씀은 상당히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의사표시를 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편이 한번 잘못 생각하면 그 잘못한 생각을 바꾸기는 상당히 힘든 노릇이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만약에 잘못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밀어낸다든지 나포하겠다는 것인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외무부의 소관을 벗어나는 것인데요.

외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들면 한일어업협정을…… 그것은 어느 일방이 파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일방이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쪽에서 정말 일본이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약점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한일어업협정도 우리가 파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요.

지금 장관께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장관 말씀이 맞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데 하나의 빌미를 줬다고 걱정을 하는데 장관께서도 혹시 일본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업협정의 파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독도 문제나 한일 문제가 나왔을 때 어업협정의 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이러한 어업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몽준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익을 100% 다 보전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의 이러한 발표는 우리의 국익을 크게 해치고 국익을 크게 손상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100% 보전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너희만,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 일본 측이 우리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외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전해 가면서 또……

○정몽준 위원 우리의 국익이 손상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이라든지 EEZ 침해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몽준 위원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그렇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도모하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장관께서도 유엔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가령 여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의 정상적인 일을 못 한다든지, 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일본 쪽에 우리의 정확한 의사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방문을 제한하고 또 지난 16대 때도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려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만류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독도를 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슨 천연기념물 보존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가겠다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나서서 만류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 그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정몽준 위원 우리 김현종 본부장께서 아침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며칠 전 외신기자클럽 가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지노선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별로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적절한 표현을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5월 초에 FTA를 위한 초안을 서로 교환한다 이러는데 그런 초안을 만들고 나면 저희 외무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초안 내용에 관해서 외무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보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역사적으로 마지노선이 지켜진 선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외무부 관계자들께서 그런 군사적인, 군사에 나오는 단어를 인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5월에 초안이 되시면 저희 외무위원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선 마지노선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 한일 FTA에서 그것은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된 경우가 있고요.

○정몽준 위원 한일 FTA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소위 말하자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정몽준 위원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불란서

하고 독일에 있던 선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도 못한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군사적인 용어를 외교관들께서 쓸 때는 가능한 한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국민들을 자극하거든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알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다음에 5월에 초안이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초안을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장관님, 오늘 하루종일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선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로 측정 계획을 이미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상태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이것을 우리 측 EEZ에 대한 침해로 보고 오늘 장관님 답변은 국제법상, 국내법상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떨까요, 시도하지 않을까요? 우선 외교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는 말씀 오늘 여러 번 들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본이 일단 통보까지 한 이상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일단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외교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외교적인 압박을 넣는데 사실은 양국이 모두 탐사 강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양국관계의 극단적 경색을 원하지 않는 만큼 원만한 해결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봐 가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입니다.

○임종석 위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돼서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고요. 시도할 경우의 문제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그것을 이제 국제법상, 국내법상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유엔해양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일부 전문가들 중 해양법에 나오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조사 범위에 일본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수로 측정도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던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들어갑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배타적경제수역법…… 이것은 우리 법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 그러니까 EEZ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법이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국제법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연안국 사이에 합의가 안 돼서 EEZ 설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예는 우리하고 일본 사이 말고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도 안 되어 있고 일본하고도 문제가 있고……

○임종석 위원 그것을 규정한 국제법이 있습니까? 국제법에는 그냥 연안국 사이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연안국 사이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임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제법에 EEZ 설정은 연안국 사이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지요? 만약 일본이 이것을 나중에 시도했을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 적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이룰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종석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국제법에 규정된 것은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우리의 권한 행사

로서 우리가 중간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EEZ 문제를 침범당했을 때의 대응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국제법에 다른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어쨌든 지금 쌍방 간의 EEZ 설정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이 문제인데, 필요하면 법을 손질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법에 의해서 단호한 조치를 한다면 해양과학조사법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는 정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해양과학조사법인데 이 국내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지요. 지금 일본이 시도했을 경우에 국제법적으로는 모호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법적인 대응 방안이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딱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국내법에 의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대체로 말씀하신 것은 해양과학조사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국내법이 필요하면 이 법을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해상보안청이 수로 측정을 하는 데서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비상업용 선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비상업용 선박은 국제법상 군함하고 똑같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연안국은 그 선박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정선 검색 나포는 할 수 없다, 또 이게 우리 법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임종석 위원 그러면 국내법에 이 법이 최종적으로 적용될 텐데, 그렇지요? 앞에 해양과학조사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업용 선박일 경우의 얘기이고 비상업용 선박, 그러니까 해상보안청이 자청 소속 선박으로 수로 측정을 해 올 때는 이 비상업용 선박으로 국제법상의 지위가 인정돼서 우리 법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정선이나 검색, 나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의 내용 같은데요, 그 경계선을 살짝 넘어갔을 때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느냐, 우리의 국내법에 의한 단호한 조치라는 게 어떤 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관심을 갖고 이 법들을 들여다본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죽 말씀하신 해양과학조사법을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상 우리가 설정한 EEZ를 침범해 들어올 때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경계선에서 갈등이 그 경계를 넘어가거나 전면화되는 것은 일본도 부담스럽겠지요. 그렇지만 그 경계선에서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아주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해양법 협약에 정지, 중지시킨다고만 규정하고 검색이나 나포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종석 위원 해양법 얘기가 아니고 우리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하여튼 우리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므로 유엔해양법 등 국제법하고 우리 국내법, 아까 말씀하신 해양과학조사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그 단계별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어떤 조치를 정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거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임종석 위원 장관님,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나 국회가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EEZ 설정에 대한 국제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안국 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국제법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이 설정한 EEZ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한 EEZ를 침범해 올 때는 우리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해양과

학조사법에 의한 정선 나포 검색도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 경계에서 갈등이 넘어오면 우리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법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비상업용 선박이라 하더라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적어도 검색 나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이게 있는 것은 군함을 포함한 비상업용 선박의 경우에 정선 검색 나포 등이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법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정선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한번 검토할 테니까 의견을 곧바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 장관께서 하루종일 답변하신 국제법상, 국내법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의외로 일본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은 역시 해경이나 군인과 같은 작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극단적 양국 간의 관계 경색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한국, 일본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히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또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위원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임종석 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입니다. 물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고요.

제가 조금 아까 죽 설명드린 내용은 한번 더 회의록을 보셔서, 현재 우리 법상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번 일을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국내법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문제니까 정부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분만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정 1분만 하세요.

○임종석 위원 한미 FTA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1분밖에 허락을 못 받아서요.

오전 설명 제가 잘 들었고요. 스크린쿼터 문제 포함해서 포괄적 협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먼저 사전에 사후조치를……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 쪽에서는 원래 요구가 완전 철폐였습니다. 146일에서 그것을……

○임종석 위원 물론 그것도 들었고요.

그러나 제 얘기는 기왕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려고 한 마당에는 이 문제를 같이 전체 협상을 끌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했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73일에서 선을 딱 그어 놓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부여받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개성공단 이슈는 중요합니다.

○임종석 위원 이것은 실제로 개성공단이 완성됐을 때 적어도 우리가 반월공단이나 마산·창원공단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한계에 다다른 우리 제조업들을 생각할 때 물론 이건 또 다른 남북경협이라는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석 위원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래 위원장은 질의를 잘 안 합니다마는 하나 물어보십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해경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런데 선박이라는 것이 구분을 좀 엄격히 하는 편이지요? 왜냐하면 사용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규제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박의 뭐랄까 기능과 역할 이런 것이 상선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무슨 보안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엄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로측정에 해상보안청 선박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탐사선이 공용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법의 적용 배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정 탐사선은 공용선이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공용선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정 공용선이다, 공용선이라고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정부 배가 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해상보안청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 해서 외국 정부 선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러면 아까 말한 해상보안청 선박과 적어도 적용 법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는 거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알았습니다.

이어서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수고하십니다.

독도 문제부터 얘기를 하지요.

수역탐사를 하러 오면 정선·임검·나포 이런 것을 국내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하겠다 그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임무는 우리 해경이 하게 됩니까, 해군이 하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선 주로 해경이 하게 됩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우리나라 해경의 선박들이 그렇게 힘센 선박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해군 함정들도 동원이 돼야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한 구체적인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놓고 조용한 외교를 펼쳐온다고 했는데 조용한 외교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켰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차제에 독도의, 지금 백령도나 연평도나 모든 지역들은 해병대·해군·공군 합동근무 하거든요? 그런데 독도만 경찰이 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도 입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병대나 해군이 가 있어야 될 곳에 임검할 데도 없는데 경찰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오고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는 때에 이 부분을 군으로 대체를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백령도나 이런 데에 우리 군이 주둔해 있는 것하고 지금 독도에 우리 경찰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종에 독도는 우리 행정구역으로서, 우리가 행정구역의 의미에서……

○장영달 위원 백령도는 행정구역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행정구역이지만 거기는 북한 접경의 최북단에 있는 우리 군사적인 아주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영달 위원 지금 일본 하는 것을 보면 언제 군함 가지고 오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지금 독도는 경찰이 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맞는 무장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본 군함이 와서 함포 한 방만 쏘면 아주 결단이 날 판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왜냐하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치안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군대가 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분쟁지역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장영달 위원 하여튼 저는 그 문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 군이 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교토의 임명관대학, 일본 말로 리츠메이칸대학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대학에 갔더니 원로 학자 한 분이, 일본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2차대전이 끝나면서 야스쿠니신사 저것 해체를 못 하고 천황제도를 해체를 못 한 것이 일본의 천추의 한이다' 일본 원로 학자가 그래요. 저것을 해체 안 하고 두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만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저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못 한다' 걸핏하면 천황 만세하고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본 민주주의의 저해요인이 천황제에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야스쿠니신사에 우리 한국 선조들이 2만 1000명이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언제까지 우리 선조들의 위령들을 여기다 가둬 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언제 이 선조들을 모시고 올 작정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야스쿠니신사에 한 2만 1000기의 우리 한국인 영령이 있는데 신도에 따라서 저쪽 주장은 일단 분사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A급 전범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분사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일본 측에 계속 거론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래서 그 가족들은 일본사람들한테 끌려간 것만도 억울한데 아직까지 선조들이 거기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에 있어서도 맞지도 않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국가가 조속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아서 이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야스쿠니신사로부터 극우적인, 전쟁범죄적인 이러한 사고를 일본 정부가 잊지를 못하고 독도에 대한 침략 이러한 못된 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스쿠니신사에 있는 우리 선조들 위령부터 찾아오는, 모셔오는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독도 문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할 수 있고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는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이 거기서 올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침략으로부터 결과된 거예요. 일본 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이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조만간에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장영달 위원 그러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신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장영달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은 해야 되지만 아무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똑같이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그 문제에 국한해서라도 북한과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게, 우선적으로 미일 동맹국인데 일본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리고 1, 2차대전 때 일본의 침략 행위들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모두 피해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독도 침략에 대해서는, 일본이 향후에 대동아공영권이라고 하는 망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 정신적 기본에서 이런 침략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는 미, 한, 북, 러, 중 이 주변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일본의 이러한 침략적인 근성들을 근본

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미국과의 경우에는 제가 외교장관회담이라든지 기타 다른 레벨에서의 협의 시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동북아의 여러 가지 원만한 인근 국가들의 관계를 위해서 미국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국도 한일관계라든지 한미관계, 미일관계가 다 원만하게 발전이 되는 것이 서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게 '독도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한일관계는 끝장나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끝장났을 때 과연 한미일 삼각동맹관계 이것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고 있을 문제인가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봐서 미국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FTA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지적하셨는데 통상본부장에게 질의드릴게요.

한미 FTA의 대상 품목이 약 1만에서 1만 3000가지 품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장영달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타협을 하려고 그래도 1만 3000일이 걸릴 판이고 이럴 텐데 이 문제를 1년 내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계속 하면서 FTA를 대응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장영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도 준비되고 있지 않고 하면서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아예 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시장 모든 것을 잠식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심리적인 우려감이 먼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1만 3000가지나 되는 품목들을 어떻게 1년 만에 해치운다는 말이냐, 아까 답변하시면서 '꼭 1년을 못박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F의 통계 문제 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많이 지적이 됐지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매달릴 이유가 있느냐, 또 자동차 전자 섬유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관세가 현재 2%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자 이런 부분들은 현지생산이 대개이기 때문에 FTA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 3000가지나 된다는 협상 품목 이런 것들로 보아서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FTA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해 놓고, 우선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졸속,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졸속으로 끝낼 계획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만 3000개의, HS단위로 해 가지고 약 1만 3000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요 수출품목하고 수입품목으로 보면 1만 300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품목별로, 특히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섬유나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민감품목이 있습니다. 민감품목 이런 것은 농수산물이거든요.

○장영달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수치를 뽑아 가지고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KIEP에서 수치를 뽑은 것에 대해서는 조작은 없었습니다.

○장영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관심이 아주 많이 가 있어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장관이 결재하시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 반, 우려 반 이것이 크다 이런 인식을 갖고 대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

에, 장관께는 해외 자국민 안전대책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작년 한 해에 해외에서 피살되거나 납치되거나 강도당하거나 폭행당한 피해 국민이 2448명이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북방 삼각동맹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오늘 종일토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현안이 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춤까지 다 추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인적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정홍보처와 같은 그런 홍보전담팀에서도 파견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홍보를 해서 이 한미 FTA가 됨으로써 어떤 부분은 나라에 이익이 되고 어떤 부분은 손해가 되며 손해가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메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 결과가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일본의 EEZ 해저 탐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웃나라인 한일관계가 원만하게, 과거 이상으로 좋은 이웃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을 잘 설득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을 자극하지 않도록, 제가 생각할 때 독도는 비록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영혼과 같은, 심장과 같은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일본 조야에 또 정부 측에 알려서 어리석은 일을 해서 더 큰 미래에, 한일관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영우 정책실장께서 본부장으로 승격된 것을 제가 축하드리면서,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평양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이 결국은 중국에게 상당한 어부지리를 주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정말 중국의 제4성과 같은 수준의 나라로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폐해 가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한에 대한, 저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대폭 증가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압박과 동시에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고 느낀 것은 어쩌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미래의 땅이 아프리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외교의 방향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칸들의 모습과 표정과 눈빛과 행동에서 제가 보고 온 것은 그들의 순수성과 동양인, 특히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인류의 측면에서도 지금 절대 최빈국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칸들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각 나라별로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 간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이 희박하고 동료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개개 나라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면 전 아프리카 대륙에 파급될 것으로 저는 마음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재확인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가치로서 뿐만 아니고 신흥 에너지 또 우리가 부족한 자원, 부존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또 시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고 특히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서너 시간 동안 달리고 갔던 그 길들을 일본이 만들어 주었고 잠실체육관과 같은, 잠실운동장과 같은 것을 중국 정부가 만들어 주고,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을 탄자니아에 만들어 준 것을 보고 저는 더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선진국가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아프리카의 이러한 변화, 세계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이 변화를 재빨리 캐치해서 실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장관님께서 유엔 사무총장 관계로 아프리카에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몇 말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외교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현재 53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0년대 말 이후에 16개 공관이 철수하고 지금 17개의 상주공관이 남아 있고 가 보니까—제가 이번에 가나와 탄자니아에 다녀왔습니다마는—대부분 서너 명의 우리 외교관이 파견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17개 공관에 근무하는 총 외교관 수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칠십몇 명 되는 것이 전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본부에서도 2개 과에 과장 2명, 직원 7명이 이 53개국의 정부, 경제통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본부도 거기에 걸맞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관 증대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오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가고 싶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은 외교의 첨병으로서의 조국관이, 애국관이 철저하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지 근무 외교관에 대한 인사고과 문제나 여러 가지 휴가를 구미와 같은 좋은 곳에 가 있는 분들의 2배로 준다든지 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뵌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또 케냐나 가나, 가봉, 콩고 같은 이런 나라들은 6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서 특히 새마을운동, 새정신운동 이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모델로 삼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와의 협력을 강력히 염원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장기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지원 분야, 인프라 건설, 플랜트 수출과 같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또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가 다르에스살람을 보고 하나 느낀 것은, 또 가나의 아크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시·도, 각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부산, 부산이 많은 나라의 도시들과 자매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르에스살람이나 아크라와 같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교류를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 유수 국공립 또 사립대학이 아프리카 각국의 국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방학 때 교수들을 보내기도 하고 초청하고 학생들의 교류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아프리카의 인식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채정 위원장, 임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0.0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그러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맞도록 ODA 원조액을 급속히 높여야 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프리카에 가셔 가지고 앞으로 3배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고는 미래의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정신인 홍익정신을 이제 세계에 적용할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 아프리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께 일일이 질의하기보다는 이번에 아프리카와 평양에 다녀와서 느낀 것을 일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 위원님,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세계 각국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개발 문제가 현재는 국제사회 최대의 관심과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천년 개발 정상회의의 결의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협조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까운 우방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도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리카 외교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만도 아프리카에 다섯 번 갈 계획을 7월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벌써 세 번 다녀왔고 앞으로 두 번을 더 다녀야 될 정도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이라든지 근무여건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그동안 한일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걱정만 끼칠 뿐이지 뚜렷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봤더니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 확실히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1954년부터 경비 부대를 상주시키고 있으며 숙박·등대·감시소·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등 매년 경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히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한일 간에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일본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인물을 독도거주자로 등재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왕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은 또 주한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로 가서 한일관계 문제, 역사 인식과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죽 봤는데 우리 견해와 너무 다른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장관께 이런 각각의 문제들을 어떻게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인식을 같이 하는지 여쭤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물어서도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1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전쟁 피해를 입은 아시아 제국에 대한 공식적 사죄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 간 배상 문제와 개인적 청구권의 문제, 그다음에 종군위안부 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난징대학살은 중국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11개 문제를 정부의 대응 못지않게 외교적으로 국회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무엇이 문제점인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문제점 지적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독도 문제에 있어서 외무부장관께서는 이전에도 한번 실효적 지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용한 외교 부분을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어떤 점에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다 하는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독도탐사 문제는 반드시, 계속 이렇게 소극적 대응만이 유효한가 외무부 측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실효적 독도 점유 및 지배기간이 종료되면 영유권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은, 지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어떤……

○朴啓東 委員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은 그러니까 실효적 독도 점유기간이, 그 지배기간이 일정 정도…… 유엔해양법에 따른 국제적 지위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임종석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독도의 영유권이 확고하게 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이 확실히 행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영유권을 확실히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朴啓東 委員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나 해결해서 자국민이 한 30년 정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나면 그 영토를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는 확실히 수십년 이상을 해 왔고 독도 영유권은 이미 확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朴啓東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독도의 경우가 아니라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가 알기로 국제법상 실효적인 지배가 어느 만큼 기간이, 시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 시효가 아마 있을 텐데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시효가 없습니다.

통상 알려져 있기로는 100년이다, 99년이다 이렇게 어느 학자들이 주장한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시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朴啓東 委員 기간은 확정된 게 없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朴啓東 委員 지금 섬과 바위는 다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것은 유엔해양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제12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면 섬과 바위 기준의 차이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람이 정상적인 거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섬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영어로 락(rock), 암석 바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지금은 독도가 아일랜드입니까, 아니면 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 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이 있었고 또 협상하는 실리 면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와 오키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도 기점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를 경우에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인간의 거주 가능성 및 자체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니까 락의 지위와 아일랜드의 지위는 완전히 다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다릅니다.

○朴啓東 委員 그런데 정부는 지금 아일랜드로 가고 있습니까, 락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당시에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 오키 중간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EEZ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것은, 그러니까 울릉도하고 오키 중간선을 제시했는데……

○朴啓東 委員 글쎄, 그것은 아일랜드냐 락이냐에 따라서 락의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면 현재 락의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는 해양법협약상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나 앞으로……

○朴啓東 委員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은 현재 락의 상태에서 앞으로 아일랜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유리하겠지요? 유인도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문리 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이라든지 타국의 사례 또 앞으로 일본의 교섭태도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朴啓東 委員 무슨 타국의 사례가 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게 판례가 많습니다. 국제법에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저는 이런 계속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무인도화 정책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법상의 어떤 협상에도 불리해지고 계속 그런 문제인데…… 2분만 더 주세요.

과거에도 실제 독도에 살았고 그리고 해양법상 아일랜드가 되려면 2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물도 있어야 되고 또 수목이 자라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뜻이다. 국민들은 빨리 유인도화하기를 요구하는데 정부가 하여튼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무인도화의 정책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유인도화 정책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좀 검토를,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도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요. 우리가 독도를 사실은 자연생태계……

○朴啓東 委員 아니, 장관님 그렇지 않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문화재관리보호법에 따라서 제한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朴啓東 委員 개방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착민이 살아야지요. 지금 주민등록증 옮겨 있는, 독도에 주민등록증 가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몇십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朴啓東 委員 몇십 명이 아니고 정부가 주민등록증 옮겨주지도 않아요. 주민등록증을 옮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활을, 생계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기껏 하는 것이 거기에 입도하는 것은 허가돼서 여행 자유화가 좀 됐는데 주민등록을 못 옮기고 있어요. 정부가 자기 땅에서 살겠다는데 주민등록 안 옮겨주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현재 김성도 씨가 호적을 옮겨서 살고 있고요.

○朴啓東 委員 아니, 호적을 옮긴 게 아니라 거기가 주민등록증을 가졌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께서도 거기 옮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朴啓東 委員 호적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엔해양법상의 제121조를 충족시키려면 유인도화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본은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민등록 옮기는 것을 허용했는데 우리 정부는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해도 안 옮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정부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왜 거기에서 경제활동하고 주민등록 옮기고 살겠다는데 거주를 제한하느냐 이것이에요.

김성도 씨 부부와 편 시인 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살 게 안 해 줘요, 살 게를. 세 사람 정도가 산다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생각하는 독도향우회를 비롯한 많은 독도 관련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거기에서 사는 것 자체를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의논하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유엔해양법상 제121조에 의한 자연조건과 사람의 조건들이 모두 갖춰지는 아일랜드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본이 무력적으로 도발을 하려 하고 그리고 국제법상의 여러 가지 교묘한 분쟁을 야기시킬 때 우리는 락에서 아일랜드화로 가는 것이 더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는 거지요, 그런 방법이 평화적인 방법이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해양법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은 시간이 가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독도도 기준은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비록 집단생활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찰 전경 요원이 한 30여명 있고 또 김성도 씨도 호적을 옮겨서 거기에서 살고 있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독도가 암석이 아닌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단 현재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어떤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제약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실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개발했을 때 독도에 미치는 자연생태 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극도로 제약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든지 일본 측의 입장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것은 이미 주권이 확립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정 지금 박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럴 테니까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 유선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김현종 본부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FTA 신속협상권(TPA)이 내년 6월까지 정부에 주어진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6월 31일까지 입니다.

○유선호 위원 만약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그 권한이 전부 주정부로 이관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 권한이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대통령에서 미국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선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FTA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게 되면 위원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와 미국이 합의해 놓은 상황에 대해서 45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모두 전부다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의원 같은 경우는 연어, 미시건주에 있는 의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남부 의원들은 면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물론 협상이 개별화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개별화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계속 협상을 해 볼 수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다른 FTA들도 보면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9개월, 11개월 이렇게 끝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졸속으로 해 가지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선호 위원 다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컨대 남미의 주요국은 미국과의 FTA를 거부하고 좌파로 갔습니다. 그런데 반해 볼리비아나 멕시코 캐나다는 FTA를 미국하고 맺었는데 그 이후에 이 나라들에 대한 평가가 대미경제의 종속 심화 또는 물이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공적 서비스가 민간기업에 넘어가면서 물가가 앙등하는 등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비교해서, 물론 한국이 이런 나라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튼튼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정이 올 가능성은 없는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우리는 EU를 하나로 치면 여섯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것을 요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FTA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멕시코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94년도 FTA 체결하기 전에 10년 동안 연평균 미국과 무역흑자가 1억 불이었는데 94년부터 2004년까지 통계를 보면 253억 불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혜택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서 중요한 공공분야를 지킬 분야도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어제 동아일보에 김현종 본부장 언급 중에서 쌀과 교육·의료를 제외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농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쇠고기 또는 낙농?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축산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우가 수입산 보다도 가격이 4배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36%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우하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시장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쇠고기가 수입이 돼도 호주산 쇠고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광우병 생기기 전에 우리가 8억 5000만 불 가치를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쇠고기 협상한 결과를 보시면, 뼈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8억 5000만 불 가치 중에서 67%가 뼈가 붙은 갈비였고 거기에 빠지는 부분이 소내장하고 또 햄버거 고기하고 플라스토 차돌박이까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호주산 고기에 대해서 대체효과가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무역조정지원법이라는 게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FTA 추진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IT나 자동차 이런 수출로 인한 이득금을 피해 보상해 주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법을 농축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유 위원님 지금 농림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농민들을 위한 연금제도하고, 두 번째는 농촌 출신 학생들이 기숙사 차원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농림부장관께서 건교부장관과 타협 중인데 단기적으로는 한 1만 호의 주택,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 호까지 농촌지역에 짓는다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그런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우리 농촌을 최소한 보호 내지 보전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농림부에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119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늘 주간지 중앙일보에 보시면 1면에 함양군에서도 억대 농민 112명을 배출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경쟁력이 있는 농민하고 농촌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위원 하여간 시급하고도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독도 주변 해역의 EEZ 수로측량 계획에 관련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주권에 관련된 문제만도 아니고 또 어업권 또 해저자원 표기문제 이런 것들만의 문제도 아닌, 상당히 동북아 전체의 정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행동들이 도발적인 것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교과서 표기 문제랄지 또 신사참배 문제랄지.

이것은 지금 동북아 정세에 불가측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일본이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이른바 국수주의 또는 동북아지역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틈새가 벌어지는 이유는 역시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의 지렛대를 좀 잃은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한미 동맹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관계가 일어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일본이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거에 잘

못한 이런 것을 청산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그러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또 한국과 일본에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동북아에 일본이 여러 가지 주변국들과 이러한 관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선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우리 외교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 원인을 첫째는 우리가 지렛대로 삼는 지렛대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의 안배에 실패를 했다, 지렛대라는 것은 가장 적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렛대로서의 효과적인 나라와의 신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관련국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다른 주변국에 곧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동북아는 이것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나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핵문제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지금 미국과의 외교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지금 북한의 위폐문제를 가지고서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명분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유용하게 보이지만,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문제를 장기적으로 키워주고 또 북한의 경제권을 중국으로 빼앗기고,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마이너스가 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설득을 못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와 위폐문제를 6자회담에서 같이 토론해 보자고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북한은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지렛대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은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김하중 대사께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김정일 방중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중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했던 지렛대 역할을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기본적인 지렛대 관련된 축들이 상당히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외교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 같은 나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주요한 국가들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전부 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해야 된다는 점도 좋으신 지적인데, 사실은 북한의 핵문제가 현재까지 교착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지렛대 문제라든지 우리 문제나 또 한미 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예기치 않게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와 관련한 것이 불거져 나와서 지금 현재 이런 일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기울인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6자회담 문제하고 이러한 북한의 불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이 대화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속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잘 숙지하고 있고, 앞으로 참고로 해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문을 보니까 고의장 세종대 교수가 독도를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던데, 그렇게 했을 경우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한다는 뜻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본 적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독도에 여러 가지 생태보전 때문에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개방문제도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개방제한은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립공원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로 정부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아까 일본의 조사선이 올 경우에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을 두고 우리 법의 준비 문제와 우리 법의 성격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실효적 지배의 전형적인 예가 영국이 지배한 포클랜드 같은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포클랜드도 그런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나 영해 문제라든가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임채정 그러니까 포클랜드가 최근에 있었던 실효적 지배의 아주 전형적인 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첨예하게 전쟁까지 했던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정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실효적 지배를 두고 싸웠던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국제법을 두고 싸웠던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나 실효적 지배도 결과적으로 국제법에 근거로 해서,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했겠지요.

○위원장 임채정 어차피 자기들끼리의 주장 속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위원장 임채정 그러니까 국제법에 대해서야 해석은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고 국제법상 이것이 한쪽으로 규정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 것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각자가 국제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의 국내법에 의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적 지배 이런 것이 영유권 확립의 기본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포클랜드, 아일랜드 같이 다른 나라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아니, 정당성과 온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가지고 했겠느냐, 이를테면 한일 간의 주장이 국제법상으로는 이것이 애매한 대목이 있고, 지금 서로 간에 인정을 안 하는 대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독도에 관한 문제가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채정 그러니까 일본의 조사선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는 법의 성격이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정 다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런데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그럴 때 그 지점에서, 그러면 이것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흡하다든지 이러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예방외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위원장 임채정 아니, 그것은 별개 차원이고요. 알았습니다.

최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마는 오후 일정들이 있습니다. 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온 국민을 분노케하는 독도 문제로 해서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무슨 회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동료 위원들이 이 회담에 우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우리 한나라당이

이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것 같이 말을 유도해 가지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 당국자들이 현황보고든지 정부의 입장을 야당 대표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동의도 얻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그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각 당 대표, 국회 대표, 상임위원장 수십 명을 모아놓고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통지하는 형식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야당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마치 야당은 반대를 해 가지고 이 문제해결이 잘 안 됐다 하는 식으로 덮어씌우기 전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까지는 오전 중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외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절제된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동북아 균형자다', '자주국방이다', '패권주의 뿌리 뽑겠다', '외교전쟁 불사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친북좌파들이 반미 획책을 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를 자초하게 된 하나의 원인도 제공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것은 우리 외교의 미숙의 결과가 아니고 무슨 패권주의가 어쩐다 하는 조로만 생각하면 대응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류슈칸 방문하겠다' 하니까 고이즈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문 환영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노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말에 대해 가지고 일개 일본의 실무자가 정세보고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은 실무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있고 대통령이 앞서서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조사선인가 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돈스러운데요. 유엔해양법 제246조에 보면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과학조사법에 보면 "EEZ 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을 시 정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을 갖다가 마치 국제해양법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할 수 있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존경하는 전여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김영남 가족들에 대한 DNA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崔炳國 委員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하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 허가해 주거나 정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채취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면 이미 조사한다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알았겠구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그런 조사나 수사를 하게 되면 주권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래요.

○위원장 임채정 전여옥 위원님 하세요.

○田麗玉 委員 아까 우리 정부가 협조를 했다. 김영남 씨를 비롯한 5명의 DNA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허용이란 말을, 외교부에서 저희 방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을 때는 허용이란 말을 썼습니다. 협조와 허용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외교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

지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방관하는 거였고, 왜 거기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장영달 위원이나 김원웅 위원이 얘기한 대로 메구미가 수백 명이나 되는 나라라서 그렇습니까? 단 1명의 메구미를 위해서 일본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인식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해양탐사라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아까 유선호 위원께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런데 장관은 이게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절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우익화라든가 우경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한미동맹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또 최근에 미국의 변화라는 것을 체크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이 단단했을 때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국제법에 의거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CIA라든가 다른 나라를 보면 2002년 판에는 독도라고 표기했던 CIA의 World Fact Book이 2004년 판에서는 독도 다케시마라고 병기했습니다.

또 포르투갈 리스본 시에서 열린 유로2004 축구대회에서 리스본 시내 중심가 광장 바닥에 설치됐던 대형 세계지도에 독도가 역시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매우 집요하게 또 준비를 많이 해 갖고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할 수 있는지 정말 오늘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1998년 한일 외무장관 사이에 맺어졌던 말하자면 신한일어업협정 여기에서 독도 문제가, 그 당시 신문 보십시오. 그 당시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즉 독도에 대해서 절반의 권리를 우리가 넘겼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것을 알면 지금 왜 국제문제를 국제법에 의해서 풀려고 또는 풀 수 있는 근거를 대지 않고 왜 국내법을 자꾸 들먹이십니까?

이것을 국제문제화하려는 게 일본의 아주 집요한 속셈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아마도 20일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자잘한 접촉사고라도 낼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분쟁으로 삼을 거고,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이런 데로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이밀고 싶어하는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무 대책 없이 또 장관께서도 중간지역하고 잠재지역 구분을 못 하시고 이래서 독도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어업협정하고 독도영유권 문제하고 계속, 아까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나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을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그때부터 아주 수차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죽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은 어업 관계를 다루는 협정일 뿐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제15조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중간지점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계시면 오해를 푸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田麗玉 委員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문헌 위원도 웃지 않습니까? 근거가 다 있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97년에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울릉도 기점이 울릉도하고 오키도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막판 99년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은 포기한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田麗玉 委員 그러면 거기에는 독도가 우리의 명확한 영토라는 게 명기됐습니까? 그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의 명확한, 아주 확실한 영토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그때 당시에도 아주 확실한 것이고……

○田麗玉 委員 그렇지 않았었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닙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도 잘 검토를 하고 그때 당시에 또 협상의 여러 가지 실리적인 유리한 점이 어떤 것이냐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중간선을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田麗玉 委員 중간선을 긋지 못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중간선은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독도와……

○田麗玉 委員 아까 지도로 다 봐도,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잠재수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간선을 긋게 되면 거기에 독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 당시 끝까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요구대로 우리가 98년도에 IMF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비판받았던 게 뭡니까? 일본의 경우는 엄청난 자료와 조사, 어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조사 어획량까지 다 했는데 우리 정부는 허술하게 하나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대로 일본 측 대로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민들이……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실제상 어획량을 봐도 우리가 6 대 4로 더 유리합니다, 현재 어업협정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田麗玉 委員 어떻게 해서 어획량이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매국협약이다 이렇게까지 어민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획량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다면 왜 어민이 못 살게 되고 어촌을 떠났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어업 문제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EEZ 내에서의 어획실적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업협상하고 EEZ는 별개의 문제다. 그게 정부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고 국제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정부의 입장을 또 주장을 믿어주시는 것이……

○田麗玉 委員 왜 믿어야 됩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田麗玉 委員 아니,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정부가 그렇다 그러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면……

○田麗玉 委員 그동안에 나왔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일본의 주장이 그것을 분리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믿어주세요'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한일신어업협정하고 독도 문제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믿어주세요' 하시기 전에 좀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 아래 또 이제까지 어떻게 이 문제가 진전되어 왔는가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사실 부정확한 인식이나 부정확한 지식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번 잘못 형성되면 불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퍼셉션(perception)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미지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퍼셉션이 잘못 형성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예가 아마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98년부터 죽 해서 8년이 지나는 상황에서까지 아직도 이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설명을 못 했다는 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오늘 누차, 아마 서너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믿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것은 EEZ라는 게 구획도 안 되어 있고 또한 일본하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잠재적인 구역 획정에 있어서 거기에 독도가 잠재적인 구역 획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리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중간수역이 꼭 독도영유권하고 관계가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해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동해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고……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때는 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하루종일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토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갖고 있는 우리의 힘이라든가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토의 실효적 지배라든가 영토 문제로서 이 독도 문제를 풀지 않고 EEZ 문제로 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기 외교부에서 작성한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도 위원님, 지금 독도의 영유권을 위원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남이 들을 때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田麗玉 委員 제가 언제 독도영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이른바 공동적인 하나의 잠재수역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데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협상을 할 때 협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이것에 따라서 독도영유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EEZ 문제로 국한해서 하겠다.

또 이 다음에 탐사 문제도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지키되 이건 EEZ 문제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을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田麗玉 委員 아니, 그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데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뭐합니까?

○위원장 임채정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다.

○田麗玉 委員 독도가 다른 데 있으면 모를까 그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가지고 해양탐사를 하러 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할 근거를 대지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디 땅이 어느 지적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꼭 누구의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땅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 땅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田麗玉 委員 아니, 그러면 지적도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정 정리해 주세요.

다음 누구세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문헌 위원 전여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이런 입장에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가 일단 우리 담 안으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둑을 우리가 재산적 피해 없이 쫓아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가 문단속 못 했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이 도둑을 쫓아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이런 나라를 위한 충정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장관도 인정을 하셨는데 일본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금 고유 영토로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일본의 고유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재판받자고 해도 비겁하게 거부하는 아주 파렴치한 나라라는 교육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작하겠지요? 일본교과서에서 이렇게 안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럴 가능성이……

○정문헌 위원 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독도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심각한 상황으로 가겠지요?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정문헌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든 지금 시점에서 푸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남기지 않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진짜로 국제재판소를 가더라도 세종실록지리서부터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더 가면 그 증거자료들이 더 점점 뒤로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답답한 것은 독도에 대한 문제 연구가 정확히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과연 지금처럼 그냥 외면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일 때는 이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맥락에서 딱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신한일어업협정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우리 영해가 신한일어업협정에 다 선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독도가 우리 땅이고 독도 주위 12해리가 우리 영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거기 제15조에 다 저기……

○정문헌 위원 제15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님은 변호사인데 어업 관련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에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데 일본의 입장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약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정문헌 위원 제가 지금 변호사인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본부장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업협정은 결과적으로 어업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영해 문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구를 해석할 때 우리는 지금 장관 말씀대로 이것은 어업 관련 사항 외엔 어떤 국제법적 효력도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것이 영해의……

○정문헌 위원 그게 우리의 입장이지요. 영해의 입장 12해리는 지금 여기, 독도랑 12해리 우리 땅이라고 한 줄도 써 놓은 것 없지 않습니까? 제15조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가 독도의 영해를 다 선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은 거기 법의 정의에 따라서……

○정문헌 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독도 12해리랑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독도를 되려 암초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니, 위원님 그러시면……

○정문헌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의 영해를 선포했다는 것이 어디, 제주도라고 명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건……

○정문헌 위원 제주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독도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영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분쟁 지역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독도를 영해로 선포할 것 같으면 분쟁 지역을 다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정문헌 위원 아니, 분쟁 지역을……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영해를 선포한 겁니다.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해를 일본이 인정을 안 했든 일단 이

조항에 대해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으로 독도 주위와 12해리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은 해석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관 말씀대로 독도에 들어오면, 신한일어업협정 EEZ에 의거해서 일본이 지금 탐사선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국제법상으로 문제돼서 나포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아닙니다. 제가……

○정문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정부가 그때 이런 협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협정이 답답한 게 비단 독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밑의 7광구에 가스층이 묻혀 있는 것도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고 7광구 위의 그 수역을 일본한테 다 넘겨주었는데 중국이랑 우리랑 사실 중간 지역 나오는 것도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빨리, 일본은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시키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뒤로 미루어진다고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좋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어떤 엑스퍼트(expert)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한일어업협정, 제16조에 보면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지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판 깨고 다시 할 수 있지요?

아까 장관께서 어민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민들 데모하는데 저희 지역구가 그쪽이라 수도 없이 쫓아다녔는데 어민들 얘기가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 어민 핑계 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배 다 몰고 가서 독도 띠 두르고 에워싸라면 나라 지킬 테니까 이런 것 어민 핑계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문단속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문단속 잘못한 것은 현실로 인정하고 들어온 도둑놈 어떻게 몰아내느냐에 지혜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 측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본 측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때때마다 그때그때 얼렁뚱땅하고 넘어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해석의 차이를 놓고 분쟁이 날 가능성을 계속 존재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명확히 하고 확실히 해 갖고 우리가 영토를 지키고 이 차제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어업에 관한 협정, 신한일어업협정 이거 폐기시키고 새로 협정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스크포스를 말씀하셨는데……

○정문헌 위원 그러면 30, 40년 후에 대륙붕, 독도 다 뺏기면 장관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제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정부가 다……

○정문헌 위원 그러면 현 정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이 문제는 정부가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국민의 위임을 다 받고 비준을 받아서 전부……

○정문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 말씀을 하나 좀……

자꾸 태스크포스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우리 정부에 이미 상당히 큰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렇게 해서 이미 되어 있고 이것을 재단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조치가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태스크포스든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말들이 많은데 신통치 않은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새로 재협상 안 하고 지키고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모든 협정이 영구하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렇지요. 3년 효력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민들 이익 때문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지금 협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독도 문제 특위에 가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정문헌 위원 독도 문제뿐 아니라 한일어업협

정 전반에 어민들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를 한다면 현재 한일 간에는 또 동해상에는 일본과 한국이……

○정문헌 위원 마찰이 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결과적으로……

○정문헌 위원 그러면 마찰이 두려우셔서 폐기 못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우리 어민들한테 더 큰 손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 마찰이 두려워서 못 하시면 일본이 만약에 울릉도에 상륙하면 마찰 두려우면 다 철수해야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법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정문헌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는 50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습니까?

○정문헌 위원 불편한 건 있지만 이건 영토에 관한 문제고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찰이 두려워서 그러면 본국에 제주도에 어느 나라 군대가 상륙하면 마찰이 두려우면 마찰 안 하고 철수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정 정리해 주세요.

○정문헌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도둑놈 못 지켰다고 문단속 못 했다고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도둑 잡자고 하는 얘기니까 도리어 장관께서 정부 입장 정부 입장 왜 못 믿느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이토록 늦은 시간까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를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협상 들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또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토론이 너무 격렬해서 제가 김새게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은 제가 장관님 따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예, 감사합니다.

○田麗玉 委員 딱 1분 만……

아까 어업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1998년 1월에 일본은 한일 실무 협정 중 65년도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마찰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이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전부 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국제규범 질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협정을 만든 겁니다. 한일협정을 하든 어떤 협정을 하든 간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100% 만족하는,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만족한 협정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미 FTA도 제가 보고할 때 한미 양국이 이익을 균분하게 균형되게 배분받을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또 위원님들도 좀더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 외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국제적인 사고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 1월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많은 마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효력이 3년이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국제간에 공존할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어떤 예의가 있을 때, 배려가 있을 때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보이는 것은 배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국익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국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때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다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본에게 던지면서 그걸 저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정문헌 위원이 말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비국제적이고 말하자

면 비외교적인 일이 일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 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국제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우리 박근혜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하는 만찬에 참석 못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로 지적됩니까?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런 여야 위원이 있는 상임위에서? 20명, 30명씩이 모여 가지고…… 더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오는데 가서 밥 먹고 올 일이 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오늘 발언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위원님, 우선은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1998년에 일본이 파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규정상 파기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1년간 유효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해서 지금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이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아까 답변하는 중에 어떻게 경솔하게 발언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오해가 계셨으면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정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정의화, 임종석, 장영달, 박계동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4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법률안과 동의안 등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권영길	김부겸	김원웅	김혁규
남경필	박계동	신기남	유선호
이성권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전여옥	정몽준	정문헌	정의용
정의화	최병국	최 성	

○출장 위원(1인)

이화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	김성원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차관보	윤병세
기획관리실장	김수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천영우
아시아·태평양국장	이혁
북미국장	조태용
구주국장	박노벽
아중동국장	마영삼
조약국장	박희권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김현종
국제경제국장	박석범
한미FTA기획단장	이혜민